

주간 통일정세

2015-49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당국회담 北대표, 회담당일 방송서 ‘이산상봉’ 언급(12/1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1일 오전 7시(평양시간) 황 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업적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장군님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았다”면서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과 같이 삼천리강산을 통일 열기로 꿰게 하고 온 겨레의 가슴을 조국통일에 대한 환희로 부풀게 하는 사변적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발언하는 모습을 방송함.
- 北 “남측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회담 결실없어” 주장(1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남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토의를 거부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고집해 나섰다”며 “남측의 이러한 그릇된 입장과 태도로 하여 이번 회담은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났다”고 보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지금 상태선 당국회담 성과 기대 어렵다” 또 압박(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이중자세, 양면술책부터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 정세를 놓고 보면 북과 남이 회담장에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형편이 못된다”면서 남한에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룩하고서도 그에는 아랑곳없이 동족대결 소동을 계속 악랄하게 벌려놓음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심히 해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있는 것도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가로막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신문은 “아무리 훌륭한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정신에 배치되게 대화 상대방을 불신하며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대결에 광분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파국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임.

- **北매체, 회담 당일에도 “南대결망동으로 전망 우려” 압박(1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대화 타령과 상반되는 도발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대화 타령만 늘어놓을 뿐 분위기 조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남한에서) 반공화국 대결망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회담 전망을 우려케 하는 요인”이라며 압박함.
 - 신문은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은 전례없이 외세와의 북핵공조 나발을 요란스레 불어대는가 하면 북 인권이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중지하고 대화와 관련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는 것으로써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함.

- **北매체들, 남북 당국회담 결렬 책임 떠넘기기(12/13,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비방중상은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화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은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화근”이라며 남한을 비난함.
 - 이 매체는 “얼마전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유네스코에서의 특별연설이라는 데서 그 누구의 핵위협과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하며 ‘국제사회 전체의 위협요인’이라느니 뭐니 하고 요란스레 떠들어댔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말과 행동을 심각하게 하여야 할 때”라고 주장함.
 - 조선신보도 ‘제1차 북남당국회담, 합의 도출을 위한 북측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개성발 기사에서 “남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입장과 태도로 하여 회담은 결실없이 끝났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남측은 (회담 기간)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지난 시기 온 겨레의 관심 속에 진행되어 북남관계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온 금강산관광의 재개 문제도 끝까지 외면하였다”며 우리 측을 비난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당국회담 개시…南 “첫 길 잘내자”, 北 “대통로 열자”(12/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개성공단에서 11일 오전 10시40분에 시작된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 1차 전체회의가 30분 만인 11시10분에 종료됐다고 보도함.
 - 뉴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전종수 북측 수석대표(단장)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어제 내려와서 개성 시내를 돌아보면서 사업을 생각했다”며 “역시 겨울이니까 날씨는 차긴 찬데 어떻게 북남이 만나서 오래간만에 풀어가자. 겨울이지만 북남관계는 따뜻한 봄별이 오게끔 쌍방이 잘 노력하자”고 밝혔으며, 이에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백범 김구의 애송시로 알려진 ‘야설’(野雪)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1차 당국회담이지 않느냐. 우리가 처음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가 첫 길을 잘 내어서 통일로 가는 큰 길을 열자”고 화답했다고 전함.
 - 전 단장은 이에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부터 첫 걸음을 잘 떤야 앞으로 남북관계도 새해를 맞는데 전망이 더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지금 거의 8년 동안 회담이 없었다. 그 사이 고위급 긴급접촉 등 여러 차례 회담이 있었지만 특례적인 경우였고, 사실상 본격적인 북남관계를 푸는 회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그래서 그간 불신과 대립이 골수로 깊어지고 장벽은 더 높아졌는데 우리가 장벽을 허물어 골수를 메우고 길을 열고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고 강조하였고, 황 차관도 동의하며 “차근차근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답했음을 뉴스는 전함.
- 남북 당국회담 결렬…차기 회담 일정도 못 잡아(12/12,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11~12일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양측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회담 종료 직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취재단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남북은 11~12일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는 8·25 합의를 이행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였다”며 “우리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환경·민생·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고 전함.
- 이어 “북측은 금강산 관광 문제 집중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있는 조치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먼저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힘.
 -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다고 황 차관은 전함.
 - 황 차관은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과 열린 자세로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38노스 “북한 서해발사장 증축 완성단계”(12/10, 연합뉴스, 38노스)
 - 연합뉴스는 38뉴스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로켓 발사대의 새 추진체 저장 병커와 엔진 시험용 구조물 공사가 거의 완료됐다”며 “이는 지난 약 3년간 진행된 증축공사가 완성단계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와 같은 전망이 38노스가 지난 10월 24일과 지난 11월 27일에 각각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의 판독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고 전하면서, 이에 38노스가 지난 9월부터 새 추진체 저장용 병커 공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함에 따라 내년 초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임.
 - 또한 38노스는 이런 공사들이 “전보다 더 크고 더 강한 추진력의 로켓엔진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엔진 시험 구조물과 추진체 저장용 병커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내다봤으며, 이처럼 로켓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만약 지도부가 결정한다면, 우주 로켓 발사를 포함한 추가 활동을 동창리 발사장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백두산 생수, 중국→北 나진항 거쳐 부산항 도착(1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7일 보도를 통해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처음 중국 백두산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생수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7일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중국 옌벤에서 생산된 생수를 싣고 북한 나진항에서 출항한 6천600t급 일반 화물선 뉴글로벌호가 7일 오전 9시55분 부산항 신항 제4부두에 입항하였고, 이 배에는 농심이 중국 옌벤조선족자치주의 백두산 지역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컨테이너 10개 분량(170t)의 백산수가 실림.
 - 뉴스는 백두산 생수가 얼다오바이허에서 훈춘의 포스코현대 물류단지, 북중 육로국경인 훈춘 취안허(圈河) 통상구를 거쳐 북한 나진항으로 옮겨진 뒤 나진항 3호 부두에서 선박에 실려 부산항으로 왔다고 전하면서, 뉴글로벌호가 하역작업을 마친 후 7일 오후 6시께 북한 원산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나진-부산 노선은 생산 공장에서 나진까지 차량으로 250km, 부산항까지 선박으로 950km로, 기존 노선보다 800km가량 거리가 단축됐다고 설명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우리 국회 여·야당의 '北 인권법' 정기국회 처리 합의 관련 '우리(北)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과 남 사이의 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저명한 사실'이라고 비난(12.8, 평양방송)
- '韓美 연합 도하훈련'(12.1~10, 경기도 연천군 일대) 실시 관련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라며 '북남당국회담을 눈앞에 두고 전쟁 불장난 소동을 벌려 놓은 것은 이번 회담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태도가 어떠한가를 뚜렷이 실증해 줄 뿐'이라고 비난(12.11, 중앙통신)
-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12.5, 서울)는 '보수당국의 참을 수 없는 폭압에 대한 항거의 필연적 맞작용이며 불의에 대한 정의의 응당한 단죄'라며 '아무리 포악한 독재자도 단결된 인민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다'고 주장(12.11, 중앙통신·노동신문)

- 대통령의 유럽순방에서의 발언(北,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등)에 대해 ‘히스테리적 광기’라며 ‘남조선 집권자는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처신을 바로 해야 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데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비난(12.11, 중앙통신·민주조선)
- ‘제14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12.7~8, 서울) 개최 관련 ‘정치 협잡꾼들의 너절한 가장무도회’라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군비경쟁, 핵전파의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과 남조선’이라고 비난(12.11,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국방부의 ‘스텔스 무인기’ 개발 착수 언급에 대해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 분위기에 배치된다”며 ‘단호한 대응조치’ 강조(12.12,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외무성 “유엔안보리 북한인권 토의 단호히 규탄”(1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작년에 이어 또 논의한 데 대해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함.
 -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유엔 무대에서 갈수록 횡포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책동에 고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끝까지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안보리가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침략행위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는 기관이지 국제적인 인권보호 증진과 관련된 문제는 권능(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권능 밖의 일일까지 간참(간섭)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초미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우리가 제소한 미국의 특대형 고문만행과 침략적인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문제들부터 취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올해 유엔 총회 제70차 회의를 계기로 제기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美 전략적 인내’ 정책 비난…“완전한 실패작” 억지(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미국은 흥심을 버리고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란 정세론 해설에서 “2009년 제1기 오바마 정권이 등장한 후 몇 달 만에 대조선(북한) 정책의 골간으로 정하고 집요하게 강행해 온 것이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며 “미 행정부의 이 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이 지난달에 내놓은 ‘정책 혁신메모’ 내용을 인용해 “조선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조웰 위트 미국-코리아연구소 연구원이 최근 토론회에서 북한의 붕괴를 통해 핵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함.
- 그러면서 신문은 “미국은 우리(북)의 변화를 유도하고 체제의 붕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제넘게 쫓아대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를 해칠 망상만 하고 있다”며 “미국이 흥심을 버리지 않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 핵 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지역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임.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중국 신임 대외연락부장, 북한 지재룡 주중대사와 회동 (12/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중국 공산당의 쑹타오 중앙 대외연락부장과 북한의 지재룡 주중 대사가 베이징에서 만났다고 보도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 대외연락부는 쑹 부장이 이번 회동에서 중-북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힘.

- 방송은 쑹 부장이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한 친서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지재룡 대사는 세대를 이어 중-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굳은 의지라고 강조했다.
- 北대표 악단들, 중국 친선방문…‘훈풍’ 북중관계 반영(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이 10일부터 15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친선 방문해 공연을 진행한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통신은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친선 방문은 조중(북한과 중국)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고 문화예술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모란봉악단, 베이징공연 직전 전격 취소한듯…귀국 중(12/12,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든 ‘북한관 걸그룹’ 모란봉악단이 12일 베이징(北京) 국가대극원 공연을 수 시간 앞두고 돌연 공연을 취소하고 평양으로 복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北이 앙코르와트 옆에 지은 박물관, 12월 4일 개관(12/1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이 오랜 우방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옆에 지은 박물관 '앙코르 전경화관'이 지난 4일 개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함.
- 개관식에는 측 안 캄보디아 부수상을 비롯해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와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함.
- 북한이 공사비 1천만 달러(한화 약 115억 9천만 원)를 들여 세운 이 박물관은 앙코르와트에서 3km 떨어진 곳에 세워졌으며, 박물관에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길이 120m의 초대형 파노라마 모자이크 그림과 부처의 대형 초상화 등이 전시됐다고 연합뉴스가 덧붙였다.

- 美 1기병사단 소속 1기병여단 병력(4,500여명) 南 순환배치 관련 '끊임없는 무력증강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위기만을 몰아온다'며 주한미군 무력 철수 요구(12.7, 중앙통신·평양방송)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한반도를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든 화근이며 평화와 안전보장의 기본장애'라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12.8,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국무부가 일본에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 매각 결정에 대해 '일본을 아시아 침략정책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긴 반평화적 범죄행위가 자기 자신에게도 참혹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12.8,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국가해사감독국 대표단(단장: 전기철 국장), 12월 8일 '국제해사기구총회 제29차 회의'(영국 런던) 참가 후 귀환(12.8,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최고검찰소 대표단(단장: 장병규 소장), 12월 8일 베트남 방문 후 귀환(12.8,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방위상의 對北 미사일위협 대비 미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도입 검토 구상 표명을 "군사대국화 전략 실현의 한 고리"라며 이를 실행할 경우 '교전상대측의 1차적 타격목표로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12.9,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식 가치관과 인권기준은 "전인류를 대상으로 한 위험천만한 인권말살 행위"라고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세(北인권문제 제기 등)" 비난 및 '인민대중의 인권옹호 투쟁' 강조(12.9,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미국과 일본의 남중국해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합의 관련 '美-日 사이의 군사적 공모결탁이 더욱더 노골화되어 보다 침략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지역의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美-日 군사동맹 강화에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12.11, 중앙통신)
- 미국의 '北 위협론' 주장의 속심은 '공화국을 압박하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형성해 보자는 데 있다'며 '미국이 우리(北)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것만큼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의 강화·발전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12.11,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역사왜곡 서적(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 전면 부정)을 美

학자·전문가들에게 배포 관련 ‘도덕적 저열성과 파렴치성의 극치’라며 ‘전대미문의 피비린 범죄 역사의 진실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영원히 덮여버릴 수 없다’고 비난(12.11,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제군사체육이사회 위원장(압둘하킴 모하메드 이싸 알샤누)과 일행, 12월 11일 평양 도착(1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은 국제사회의 ‘테러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은 반테러전을 명분으로 국가테러행위와 인권유린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미국의 반테러전 불허’ 주장(12.12, 중앙통신·노동신문)
-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단장, 12월 9일 아시아 의회 회의 제8차 총회 전원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정전협정→평화협정 교체, 연방제통일’ 강조(12.12, 중앙통신)
-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北 대사(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통일당 대회 참가), 12월 10일 주재국 전국 말라이통일당 위원장 면담(12.12,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동력성 대표단, 12월 12일 귀국(12.12,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수소탄 폭음 올릴 핵보유국”...당국자 “수시적 의미”(1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평천혁명사적지 시찰에 나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우리 수령님(김일성 주석)께서 이곳에서 올리신 역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올릴 수 있는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10일 보도함.
 - 그러면서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사적지를 둘러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군수공업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날 시찰에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 홍영철 기계공업부(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고 설명함.
- 북한 김정은 메기공장 시찰...“본보기 공장”(12/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9일 메기공장’을 1년 만에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한 해 만에 다시 찾아왔는데 공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장, 우리나라 양어 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이 또 하나 생겨났다”고 치하함.
- 그는 “양어 부문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인다면 우리나라(북한) 양어 부문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번 시찰에는 오수용 노동당 비서와 조용원 노동당 부부장 등이 동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 관료들, 싱가포르서 MBA 연수(12/9, 자유아시아방송, 워싱턴포스트)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싱가포르의 대북교류단체 조선 익스체인지의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 경제 및 경영 관료 12명이 싱가포르에서 지난 3개월 동안 회계, 재무, 인적 관리 등을 포함한 소규모 경영전문대학원 과정 연수 (mini MBA)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 관료 및 전문가들이 세계 각지에서 초청돼 온 전문가 또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강사진에게서 교육받았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회사들도 방문해 견학 학습도 마쳤다고 전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은 북한인들이 비자 없이도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 주선이 더 수월했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조선 익스체인지가 2007년부터 선진 경영과 경제를 교육해 온 북한 관리들만 해도 이미 1천명이 넘는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관료들이 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즉 웰남에서 연수를 받아왔고 특히 싱가포르가 교육 관련 외의 분야에서도 북한 교류와 관련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정일 4주기' 띄우기 총력…代 이은 총성 유도(12/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서거 4돌에 즈음해 여러 나라에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면서 멕시코에서 김 위원장의 저서에 대한 독보회(교양 자료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정책과 시사 문제를 해설하는 소모임)가, 페루에서는 관련 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슬로베니아에서는 사진 전시회가 각각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됐다고 보도하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4주기(12월17일)를 열흘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에 총력전을 펼침.
 - 통신은 이어 말레이시아와 인도, 멕시코, 덴마크 등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회고위원회가 결성됐다고 소개하였고, 이란신문인 ‘이란뉴스’와 홍콩잡지 ‘국제연계’에 김 위원장의 업적을 담은 여러 제목의 글을 편집한 특집 기사가 실렸으며 이들 매체는 “조선 인민이 김정일 영도자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도 7일 사설을 통해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 위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신 인민 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며 김정일 위원장을 우상화하였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 염원이 실현된 부강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 천하 제일강국을 일떠세우기(기운차게 일어서기)를 위하여 더욱 역세계 싸워 나아가자”고 촉구함.
- 北, 당 대회 앞두고 새 우표도 제작…‘김정은 치적’ 선전(12/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9일 “조선우표사에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진행되는 뜻깊은 2016년에 즈음해 발행하게 될 새 우표 도안들을 창작해 내놓았다”고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조선우표사는 여자축구 대표팀의 2015 동아시아컵 우승, ‘물고기 대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증가한 어획량, 산림복구 활동, 과학기술 중시 정책 등을 주제로 복수의 그림을 새 우표들에 넣을 예정이며, 또한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성과물’로 선전하는 평양국제비행장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의 모습을 담은 우표첩을 발행할 계획임.
 - 이어 방송은 “우표와 우표첩이 발행되면 당 제7차 대회를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고무 추동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선전함.

- 북한, 세계인권의 날 맞아 “인권 최상으로 보장” 선전(12/10,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0일 ‘세계인권선언과 세계인권의 날’이란 글에서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공인하듯이 지구 상에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우리나라에 서처럼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는 없다”고 주장하며, 8일 청소년 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준공식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시설을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 희망의 나래를 펼치는 사랑의 요람’,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치켜세움.
 - 우리민족끼리도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보는 판이한 인권상황’과 ‘인권이자 국권이다’란 글에서 “공화국은 창건의 선포와 함께 인민 대중의 참다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왔다”며 “인민들은 당과 국가가 펼치는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시책에 의해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누리며 보람찬 삶을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의 벗들이 우리나라(북한)의 현실을 목격하고 한결같이 ‘인권이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는 나라’라고 격찬해마지 않았다”고 선전함.
- 北 TV ‘윤봉길 의거’ 방영…“김일성 노선 정당 논증” 주장(12/1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0일 “지난 9월(부터) 조선중앙텔레비죤(TV)은 윤봉길 열사(열사)의 의거를 내용으로 한 텔레비죤 소개 편집물 ‘열사가 남긴 교훈’을 방영했다”면서 “현재까지 3차 방영된 텔레비죤 편집물은 지금도 전국 각지의 시청자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 편집물이 일본에서 윤 의사의 유해가 발굴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26분짜리 영상이며, 1932년 4월 29일 홍콩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축하 기념식장에 윤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진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이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리 철 실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작자들은 력사(역사) 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많은 자료들을 고증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신문은 “편집물은 테로(테러)의 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민 항쟁으로써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는 김일성 주석의 조국해방 로선(노선)과 업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논증)했다”고 주장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9월 초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 참석도 거론하면서 “리승만(이승만)을 비롯해 친미, 친일주구, 사대 매국노들로 조작된 남조선 정권은 그 무슨 법통을 운운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고 비난함.

■ 북한, 당국회담 당일에도 ‘금강산 관광’ 띄우기(12/11,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11일 ‘푸른 옥에 핀 꽃, 천하명승 금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산악미와 계곡미, 고원경치, 전망경치,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 등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절경을 한 곳에 모아놓은 명승의 집합체”라고 금강산 산세를 치켜세움.
- 매체는 “계절과 시간, 날씨에 따라 사시절 시시각각 아름다운 천태만변 금강산은 오랜 력사(역사)를 거쳐 내려온다”면서 “한 번 보고 금강산의 모든 경치를 다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산수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고 선전하였고, “조선의 금강산은 으뜸가는 천하절승(천하절경)으로서 민족의 제일명산이며 세계적인 명산”이라며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세상 사람들의 찬사를 다 합치면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들의 높이를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함.

- 김정일 사망 4주기 즈음 ‘김정일 동지를 영도자로 높이 모시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긍지 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울 수 있었다’고 인민사랑과 선군혁명 영도업적 등을 칭송하며 ‘김정은 영도 따라 인민의 낙원,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세우자’고 주장(1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우리(北)의 승리와 번영의 길은 “주체의 한길, 자립의 한길뿐”이라며 쏘민은 ‘우리식, 우리 힘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자’고 독려(12.9,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 요해(12.10, 중앙통신)
- 北,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호소문에 온 나라 노동계급이 열렬히 호응해 나서고 있다고 선전(12.10,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부강조국 건설에 이바지한” 일꾼-근로자들 에게 「감사」 전달(12.13, 중앙방송)

- 김정일(원산군민발전소)·김정은(류경원·갈마식료공장) 현지지도 표식비 각각 건립 및 준공식 진행(12.12,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北 선전매체 “구월산에 무선원격 산불감시체계 운영”(12/7,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7일 ‘우리 식의 산불방지용 무선원격 감시체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국토환경보호성 해당 부문 일군(일꾼)들과의 긴밀한 연계(연계) 밑에 산불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무선원격 감시체계를 세웠다”고 전함.
 - 매체는 “산불 감시에 편리한 산봉우리에 송상(送像)카메라(영상전송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송상카메라의 전기는 태양빛전지판을 리용해(이용해) 해결하고 있으며 지령실은 송상카메라가 세워진 곳으로부터 수십 리 떨어진 군산림 경영소 양묘장에 있다”고 소개하였고, 이어 “지령실에는 송상카메라에서 보내오는 수십 리 구간의 산림 자원의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고 이 설비들 역시 태양빛전지판을 이용해 전기문제를 해결했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매체는 “지난 기간에는 산불이 나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며 “해당 지역의 방화대 력량(역량)을 신속히 기동시켜 산불이 번져지기 전에 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였고, 황해남도 은률군이 무선원격 산불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100여 명의 산불 감시원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함.
- 북한 리수용 “김정은, 삼림 파괴와의 전쟁 선포”(12/7,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에 따라 삼림 파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규모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함.

- 방송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의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리 외무상이 이날 각국 대표단에 이같이 밝히면서 지구 차원의 환경 보전 노력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하였음을 보도함.
- 리 외무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삼림 파괴와 전쟁을 선포하고 온 나라의 산을 나무가 뺏뺏하게 들어찬 황금산으로 만들고자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다음 10년여 동안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나무심기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면서 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7.4%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동당, ‘돈줄’ 지방 무역국 흡수(12/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아 김정은 제1비서를 ‘인민의 지도자’로 치켜세우기 위한 건설 공사에 내부 원천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해 북수의 함경남도 소식통은 “현재 각 도별로 애육원과 육아원, 경로원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도당은 인민위원회 무역국을 자기 산하로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광물 등 수출원천을 당과 군대 산하 외화벌이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 무역국이 다루는 수출원천은 보잘것 없기 때문에 무역국이 버는 외화도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함.

■ 北, 25년 만에 ‘재정은행 대회’ 연다…1990년 이후 처음(1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일성 동지께와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0일 제3차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 참가자들이 경의를 표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제3차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음.

다. 경제 상황

- 북, 침투용 잠수함 7척 건조(12/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함경도의 소식통이 “올해 초부터 청진조선소에서 3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침투병력 수송용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며 “당창건 70돌이었던 지난 10월까지 7척의 잠수함을 완성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소식통은 “청진조선소에서 만드는 잠수함은 길이 40미터, 폭 4미터에 항해사(승조원) 9명과 전투원 3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수심 60미터에서 최대 80시간 이상 항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무장으로는 어뢰 4발이 전부인데 더 많은 인원을 태우기 위해 기계설비들을 극도로 간소화였고 잠수함을 만드는 강판은 전부 러시아제, 잠수함 엔진은 독일제라고 전함.

- 북, 미래과학자거리 아직 미완성(12/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월 2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장방문을 한데 이어 11월 3일 요란한 준공식을 가진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과학자들이 입주할 수 없다고 있다고 9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함.
 - 소식통은 “미래과학자거리 준공식은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고, 외부공사와 상업시설 공사는 끝났지만 과학자들이 입주해야 할 아파트는 이제야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11월 3일의 준공식 때 내부공사까지 완공된 아파트들은 53층으로 된 ‘은하’와 ‘과학중시’, ‘주체화’ 아파트를 비롯해 8개동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개 동은 외부공사만 끝냈을 뿐 내부공사를 겨우 시작할 무렵이었다고 밝힘.

라. 대외 경제 관계

- 태국, WFP 대북지원사업에 26,000 달러 지원(12/9, 미국의소리, 타스통신)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세계식량계획(WFP)이 ‘2015년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미화 2만 6천(\$25,617) 달러를 기부했음을 밝혔다고 9일 보도함.

- 방송은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태국 정부가 이 기구를 통해 식량 지원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며, 이 자금은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제공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세계식량계획의 타이모 소장은 타스통신에 현재 대북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은 목표 금액의 53%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였고,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목표한 금액은 1억 6천 780만 달러지만, 지난 6일 현재 모금액은 8천 90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1~10월 미-북 교역, 지난해 대비 79% 감소(12/9,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60만 달러(\$4,593,00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음을 9일 보도하면서,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21,900,000)의 21%에 불과하다고 전함.
 - 방송은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인데,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전체 수출액의 85%가 넘는 390만 달러 (\$3,942,000)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함.
 - 식량농업기구 “북한 산림 복구에 15만 달러 지원”(12/1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해 15만 달러(1억 7천 700여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보도했으며, 이에 더글라스 맥과이어 FAO 산림위원회 정책조정관이 “산림경관 복원 메커니즘(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Mechanism) 운영위원회가 지난 7월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산림 복구 사업은 내년 초쯤 북한을 방문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방송은 맥과이어 조정관이 “북한 당국자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FAO는 산림 정책 고문관을 고용해 북한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한의 산림 복구 사업에 한국 정부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음을 보도함.

- 러 에너지부 차관 방북…“전력분야 협력협정 체결 예정”(12/10, 타스통신)
 - 타스통신은 10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안톤 이뉴친 에너지부 차관을 대표로 한 방문단의 이틀 간 평양 방문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전력 에너지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을 보도함.
 - 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이미 관련 협정 초안을 승인한 상태이며 이뉴친 차관이 북측과 협의한 뒤 최종 서명할 계획이라 전했으며,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지난 11월 말 게시된 초안에 따르면 협정은 러-북 양국이 전력 분야 기술 교류, 전력 공급, 관련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통신은 현재 러-북 양측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북한 나선시를 잇는 송전 선로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연해주 지역 발전소의 잉여 전력을 북한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는 이 사업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극동 지역의 잉여 전력을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유엔 식량기구, 엘니뇨 대응 지원국에 북한 포함”(12/1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대상으로 엘니뇨 현상에 따른 복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보도하면서,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가 엘니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16개국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밝힘.
 - 방송은 북한과 몽골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원 대상국에 포함됐지만, 몽골에서는 식량농업기구만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북한에선 두 기구 모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방송은 식량농업기구가 가뭄이나 폭우 등 기상변화를 불러오는 엘니뇨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적으로 기상급변에 대비가 부족한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한 조림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 역시 올해 상반기 북한의 4개 도에 1천372ha에 달하는 산간 지역에 나무 700만여 그루를 심었다고 덧붙였다.

- ‘북한, 이스라엘서 40만 달러 규모 금 수입’(12/11, 미국의소리, 예루살렘 포스트)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예루살렘 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하여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40만 달러 어치의 금을 수출했다고 11일 보도하였고, 이스라엘 관세청의 데이비드 후리 국장이 이스라엘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방송은 후리 국장이 “유감스럽게도 북한으로 금이 수출됐고 이 사실이 적발돼 유엔에 설명을 해야 했는데, 2011년 이후에 북한으로 수출된 금은 없으며 이후 추가로 북한에 금을 수출하려던 시도는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이 전국의 노동계급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종업원 켈기모임, 각지 공장·기업소(김책제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에서 진행하고 결의문 채택(12.8, 중앙방송)
- 자강도, 내년 산림 복구전투 준비사업(나무모 생산 계획 초과 수행 등)에 주력(12.8, 중앙방송)
- 장자강발전소 등(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평양객화차대·선교편직공장 등) 공장·기업소 종업원들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 호소문 호응’ 켈기모임 진행 소식 보도(12.9, 중앙방송)
-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인 ‘조선식의 라선식 뇌CT 설비’ 개발(12.9, 중앙통신·중앙방송)
- 올해 기관·공장·기업소·협동농장에 2,000여개(황해남도 80여개 등)의 과학기술 보급실 조성 및 일꾼들의 원격교육대학 강의 수강(12.9, 중앙통신)
- 농업과학원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의 “온실 남새연구 성과(설란화 재배방법 과학화, 새로운 양배추 육성방법 등)” 선전(12.9, 중앙통신)
- 평양시 송배전부, 전력관리사업을 개선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선전(12.9, 중앙방송)
- 제31차 국가과학원 과학기술축전(12.8~11) 폐막식, 12월 11일 국가과학원에서 진행(1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러시아 ‘전력 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 12월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인(1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불가리아 ‘과학·교육 및 문화 분야 협조에 관한 계획서’, 12월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조인(1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3차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및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미래과학자거리 및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등 참관(12.12, 중앙통신·평양방송)
- 평양 강냉이 가공공장 새로 건설 등 ‘올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여러 생산기지들 신설 및 개건’ 선전(12.12, 중앙통신)
- 제3차 전국 재정은행일꾼대회, 12월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3, 중앙통신)
- 평안북도 수산관리국 일꾼들과 어로공들, 연간 수산물 생산계획(126.4%)과 물고기 잡이 계획(104.6%)을 넘쳐 수행(12.13, 평양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北외화별이 회사, 무역와크(허가증) 장사로 돈방석”(12/8, 데일리NK)
 - 데일리NK는 북한 국가기관 산하 외화별이 회사들이 내년 무역 와크(허가증)를 신흥부유층인 돈주들에게 고율의 임대료를 받고 양도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외화별이 회사들이 연말 김정은에 대한 충성자금 마련을 위해 임대료를 받고 무역 와크를 양도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하여 8일 보도함.
 - 이와 관련하여 소식통은 “인민무력부, 당기관 소속 힘 있는 무역회사들은 와크 임대료 수 십년째 앉아서 달러벌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연말이 되면 김정은 충성자금 마련을 위해 수수료뿐 아니라 뇌물을 받고 와크를 돈주들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많아진다”면서 “무역와크는 제도적인 것보다 뇌물을 많이 바쳐야 보다 많은 와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간부들은 연말마다 충성자금 바치기 경쟁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 특히 소식통은 “와크는 있지만 돈벌이를 제대로 못하는 무역회사 같은 경우, 돈주들에게 와크를 넘겨주고 돈을 벌어서 회사를 운영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고, “최근 시장에서 자동차 타이어 수요가 많아지면서 신의주 돈주들이 중국 시장에서 타이어를 수입하기 위해 타이어 수입을 할 수 있는 외화별이 회사에 임대비용을 주고 와크를 빌리고 있다”면서 “중국시장 타이어 한 짝에 200위안인데, 한 짝당 와크 임대비용이 11%로 약 25위안을 이 기업소에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서 '소년장수' 모바일 게임 인기(12/9, AP통신)
 - AP 통신은 북한에서 만화 '소년장수'를 소재로 한 손전화용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9일 보도하면서, 지난 9월 출시된 이 게임은 특히 여가를 즐길 시간과 돈이 있는 평양에서 즉각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함.
 - 통신은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을 내려 받을 수 없어 이용자들끼리 무선 연결인 블루투스를 이용해 게임을 공유한다고 설명하였고, 소년장수 만화와 게임이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는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인공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함.
- 북한, '걸그룹' 모란봉악단 연일 극찬...“한순간에 매혹”(12/10, 조선중앙통신; 12/11, 조선의오늘)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생신하고 특색 있는 공연무대를 펼치는 모란봉악단'이라는 기사에서 “모란봉 악단이 이번 중국방문 기간에도 예술단체의 생기발랄한 모습과 만사람을 끌어당기는 예술적 매력으로 중국 인민들을 끝없이 매혹시킬 것”이라고 보도함
 - '조선의 오늘'도 11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유정 교원(교수)이 기고한 '모란봉악단의 개성적이고 특색있는 공연형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하면서,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형식과 양상, 편성과 편곡 수법이 독특할 뿐 아니라 황홀하고 이채로운 조명효과와 배경 등도 기성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것이고 경이적인 것”이라며 선전함.
- 1천200여 개 질병 진단 앱 개발했다고?...북한, 의료성과 홍보(12/10, 조선의오늘; 12/11, 노동신문; 12/12,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고위층들이 틈만 나면 외국에 나가 신병을 치료하는 상황에서 북한 매체는 1천개가 넘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는 등 의료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말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나노기술연구소가 개발한 가정용 의료진단 및 치료지원 애플리케이션 '명의원'이 널리 판매·보급되고 있다고 소개함.

- 이 제품에는 1천200여 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종합진단편, 30여 개의 주요 증상을 통해 350여 개의 질병을 예진해볼 수 있는 예진편, 3천여 개의 치료법을 제공한 치료법편 등이 들어있다고 통신은 전함.
- 노동신문도 11일 ‘옥류아동병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태어났다가 치료에 성공한 리위성 어린이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평양 옥류아동병원의) 김향순, 한용원 동무를 비롯한 안과와 고려 치료과의 의료일꾼들이 망라된 유능한 의료집단의 진지한 사색과 탐구는 위성이의 눈 회복 치료에 기적 같은 성과를 안아왔다”고 보도함.
- 또한 ‘조선의 오늘’은 10일 7천여 종의 신약과 고려약들의 약리작용과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약물정보를 담은 임상약물정보 사이트 ‘약샘’을 개발했다고 선전함.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韓·유엔 군축·비확산회의…반기문 “핵무기 제거노력 강화”(12/7, 연합뉴스)
 -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이 공동 주최한 ‘14차 한국·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으며, ‘보다 안전한 세상을 향한 미완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이란 핵합의와 북한 핵문제 등 지역 이슈와 우주 안보, 핵 안보 등을 주제로 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북핵 등 이번 회의의 의제와 관련해 “지역 및 세계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밝히고, 특히 핵무기에 대해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이번 회의에는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 시모네타 디피포 유엔외기권사무소장, 피에트 드 클릭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네덜란드),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외교부 과장, 우 지엔지엔 중국 외교부 과장 등 국내외 군축, 비확산 전문가와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했음.

나. 미·북 관계

- 백악관, 북한 수소폭탄 주장 일축…“상당히 의심스럽다.”(12/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평천역 명사적지를 시찰한 자리에서 ‘수소폭탄’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가 파악한 정보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북한의 수소폭탄 개발 주장을 일축했음.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야기하는 위협과 위협,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동맹인 한국뿐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에도 불안정과 안보위협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망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덧붙여,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북한은 결코 자신들이

추구하는 번영과 안보를 달성할 수 없으며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케리 “북한 통탄할만한 인권위반…안보리 논의 환영”(12/1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공식 논의된 데 대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그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 등을 조사한 오늘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환영한다.”고 말했음.
 - 케리 장관은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과 실종, 임의 체포, 성폭행과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 강제 노동, 강제 낙태, 고문, 8만~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의 수용소 구금 등 북한의 통탄할만한 인권위반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데 안보리 회원국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우리는 또한 북한이 세계인권선언에 반영된 사안들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 중·북 관계

- <北 장성택 숙청 2년> 북·중 관계 해빙무드 이어질까(12/7, 연합뉴스)
 - 2013년은 북·중 관계에서도 전환점을 맞는 한해였음. 갓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크게 분노했던 상황에서 북한의 장성택의 처형은 중국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음.
 - 양국관계는 지난해 2월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을 마지막으로 고위급 인사 교류가 1년 반 이상 중단될 정도로 장기간 얼어붙었음. 냉기류에 휩싸여 있던 북·중 관계는 올해 하반기 들어 상당한 속도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지난 9~10월 양국의 주요 기념일에 고위급 대표단을 상호 파견한 게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음. 북한은 우려됐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않는 등 중국의 체면도 세워줬음.
 -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하반기 들어 북·중 관계에 개선, 복원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의 향방은 결국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태도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김 제1위원장의 첫 방중 역시 북한의 핵 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관측이 많음.

- 中, 北인권 안보리 논의 반대...“인권문제 대화로 풀어야”(12/9, 연합뉴스)
 - 중국정부가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중국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한 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한결같이 반대한다.”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우리는 인권문제는 마땅히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를 희망하며 마땅히 반도의 평화 안정에 진정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부 안보리 외교관들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표결에서는 패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음.

- 中, 김정은 ‘수소폭탄’ 발언에 “정세완화 도움 되는 일 하라.”(12/10,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에 대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것”을 촉구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며 취약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관련 당사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그는 당사국들을 향해 한반도의 평화 안정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건설적으로 노력할 것도 촉구했음.
 - 이 발언에는 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중국이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됨.

- 中외교부 “모란봉 악단 공연은 북한이 양국관계 중시한 때문”(12/11, 연합뉴스)
 - 북한이 모란봉 악단을 중국에 보낸 것은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11일 말했음.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모란봉 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베이징 공연은 양국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전통의 우의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화 대변인은 또 이번 공연이 양국 인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속적이고 건강한

양국관계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총애하는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으로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북·중 관계는 지난 10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원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전격 방문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음.

■ ‘수소폭탄’ 발언 모란봉공연 취소에 영향?…北·中 해빙에 ‘찬물’(12/13, 연합뉴스)

- 방중해 리허설까지 마친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12일 공연 몇 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되었음. 중국 신화통신은 공연취소의 원인으로 ‘공작(업무) 측면’에서 서로 간의 소통 연결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감안하면 공연 자체에 관한 불협화음이 공연을 무산시킨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큼.
- 그러나 북한이 중국을 직접 겨냥해 공연을 막바지에 취소시킨 것이라면 당분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음. 또한, 공연을 앞두고 모란봉악단이 10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것과 비슷한 시점에 보도된 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에 중국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 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발언 등 핵 문제가 공연 취소에 영향을 줬다면 당분간 양국관계는 과거의 냉각기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음.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이번 사태가 초래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장의 깊이는 달라지겠지만 북·중 간 우호관계 복원 모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탓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기에 방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이번 사태는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훼손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인들의 대북 이미지가 나빠지면 중국 지도부 역시 여론을 중시하는 탓에 앞으로의 대북 외교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라. 일·북 관계

■ “일본-북한 지난달 중국서 납치문제 실무 접촉”(12/12, 연합뉴스)

- 일본과 북한이 1970~1980년대 평양에서 납치된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중국에서 실무자들이 만났다고 교도통신이 양국 관계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2일 보도했음.

- 이 관계자는 양국 실무자들이 최소 두 차례 만났다고 하며, 한 번의 상하이에서 회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11월 중순에 이뤄진 두 번째 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이 납치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최근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즉각적이고 정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 이에 북한이 어떻게 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이 평양 외곽에서 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골이 포함된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논의에 반대표 던질 것”(12/9, 연합뉴스)
 - 러시아는 10일 열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추르킨 대사는 이날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 시작에 앞서 열릴 절차 표결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반대하는 중국을 지지할 것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럴 것”이라고 답했음.
 - 추르킨 대사는 “유엔의 모든 기구는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있으므로 그곳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주) 12월 안보리 업무 일정이 확정됐을 때 북한 인권 관련 회의 개최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새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다룰 경우) 절차상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193개 회원국 유엔 총회는 지난해 유엔조사위원회에 의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난 후 안보리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촉구했었으나, 안보리의 ICC 회부 시도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부딪힐 것으로 외교관들은 전망했음.
- 러시아 전문가들 “김정은 수소폭탄 발언은 협상용 허풍”(12/11, 연합뉴스)
 -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듯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협상용 허풍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음.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위원장 프란츠 클린체비치는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에 대해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날 모든 세계가 모르게 비밀리에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전에도 유사한 위협적 발언을 했음을 상기시켰음.
- 클린체비치는 그러나 김정은의 발언에는 일정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오늘날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을 포함한 어떤 보호수단도 한 국가에 완벽한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하며 힘의 정책은 부메랑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미국을 겨냥했음.
-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블라디미르 코모예도프도 “허풍이자 헐박용”이라면서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와 미국은 물론 중국도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수소폭탄 발언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음.

■ 북·러, 전력분야 협력협정 체결...나선시 전력공급인듯(12/11, 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11일 전력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음.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이날 조인식에는 허택 북한 전력공업성 부상, 안톤 이뉴친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음.
- 이번 협정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나선특구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는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북·러 양측은 현재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극동 연해주를 잇는 송전 선로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연해주 지역 발전소의 잉여 전력을 북한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바. 기타

■ 유엔 안보리, 2년 연속 공식회의에서 북한인권 '성토'(12/11, 연합뉴스)

- 안보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회의 소집 여부를 절차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했으며, 절차투표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음.
- 자이드 라아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서 수백만

- 명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 또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미국의 파워 대사는 중국 등을 겨냥해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으며, 오준 유엔 대사는 “작년에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북한에서 변한 것이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자고 역설했음.
 - 이날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 문제가 2년 연속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짐에 따라 북한이 받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나. 한·중 관계

- 中외교부 “한국군의 어선단속정 경고사격 진상조사하고 있어”(12/9, 연합뉴스)
 - 지난 8일 북방한계선(NLL) 남쪽을 침범한 중국의 어선 단속정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은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 주한대사관이 한국 측과 소통하면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어선 단속정에 타고 있던 선원이나 단속요원이 부상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는 없다면서 계속 한국 측과 소통하면서 한국 측에 이들의 안전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앞서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그 과정(중국 어선의 월경)에서 양측이 ‘폭력 대응’을 하는 양상이 전개돼왔지만, 지금까지 한국이 해군까지 동원해 중국의 관용선박에 경고사격을 가한 일은 없었다.”며 “한국의 행동은 어쨌든 지나치고 비합리적”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였음.
 - 우리군 관계자는 전날 “오늘 오후 2시 46분께 백령도 동쪽 해상에서 중국 어선단속정 한 척이 NLL을 1노티컬 마일(약 1.8km) 침범했다.”며 “우리 해군 고속정이 경고사격을 하자 단속정은 NLL 서북쪽으로 넘어갔다.”고 밝혔음.

- 한·중 FTA 20일 공식발효…양국 당국자 “이행이 가장 중요”(12/9, 연합뉴스)
 - 한·중 양국이 9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민간 공동연구가 시작됐던 한·중 FTA는 오는 20일 공식 발효함.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베이징 상무부에서 열린 외교공한 교환식에는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음.
 - 김 대사는 인사말에서 “14개 분야별 이행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한·중 FTA 이행을 잘 점검해나가자”고 말했으며, 또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부장도 발효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동의를 표시했으며, “2016년에는 중한 FT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관계가 하락세를 좀 멈추고 상승세를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음.
 - 중국 측은 또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나가자고 했으며, 김 대사는 이에 “한·중·일 FTA도 조속히 체결되고 RCEP도 빨리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음. 또 양국이 홍보협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FTA 효과를 극대화해나가자고 말했음.

다. 한·일 관계

- “아베, 한·일 정상회담서 군위안부 기록유산 추진에 우려 표명”(12/8,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한국 측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2일 서울에서 박 대통령과의 회담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서로가 ‘이것으로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등록 움직임이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일한친선협회회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중의원이 8일 도쿄 자민당 본부 강연에서 밝혔음.
 -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것이 “비정부기구(NGO), 민간이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는 전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이달 7일 자신과 만났을 때 “한국은 그렇게 달아날 곳이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 **日관방 “韓용의자 얼굴공개는 언론이 멋대로 한 것…정부 무관”(12/10, 연합뉴스)**
 -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한국인 전모(27) 씨의 얼굴과 실명이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자국 정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스가 관방장관은 10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특별히 얼굴 사진을 제공한 것은 전혀 없으므로 미디어 종사자가 멋대로 한 것이 아니겠냐.”며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전씨의 신상 노출에 관해 한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정식으로 항의했다는 보도의 사실 관계를 질문 받고서 “그것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반응했음.
 -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씨의) 사진과 이름이 공개되고 신원이 지나치게 자세히 공개된 것 등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항의를 했다.”고 말했음.

- **전씨 日재입국때 화약추정물질 반입…한때 ‘야스쿠니 불만’ 거론(12/11, 연합뉴스)**
 - 일본 야스쿠니 신사(도쿄 지요다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체포)가 지난 9일 일본에 재입국했을 당시 화약으로 보이는 물질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음. 또 경찰 조사에서 한때 “야스쿠니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11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전씨가 9일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재입국한 뒤 체포됐을 때 그의 수하물에서 화약으로 보이는 모래 모양의 물질과 타이머, 배터리 등 시한(時限)식 발화장치의 재료가 발견됐음.
 - 전씨는 조사과정에서 “내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공권 등과 대조한 결과 전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 물건들은 지난달 23일 폭발음이 들린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것들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 경찰은 전씨가 타이머식 발화장치를 가동시킨 뒤 떠난 것으로 보고 ‘폭발물취급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11일 오전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공안부는 전씨의 한국 내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수사당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 정상회담 후 두 번째 위안부 협의…출구 ‘안갯속’(12/11, 연합뉴스)
 - 오는 15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 여부를 가름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가운데, 이번 협의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연내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번 국장급 협의가 올해 마지막 접촉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옴.
 - 이에 따라 양측 수석대표인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로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임. 우리 정부는 협의 가속화를 통해 연내 타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한·일 양측 간에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연내 타결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인 전모씨가 용의자로 일본 측에 체포된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에 대한 우리 검찰의 기소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

- 야스쿠니용의자 반입 가루 정체 놓고도 韓日 ‘이견’(12/11, 연합뉴스)
 -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한국인 전모(27) 씨가 일본으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루의 정체를 두고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엇갈리는 설명이 나오고 있음.
 - 일본 언론은 전씨가 이달 9일 일본에 재입국했을 때 그의 위탁 수하물에서 화약으로 추정되는 가루 상태의 물질과 타이머 등이 발견됐다고 11일 일제히 보도했으며, 그가 재입국해서 야스쿠니 신사에 ‘다시 한 번’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하며 반입된 가루가 화약일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음. 이에 반해 김포공항은 전씨가 가지고 있던 가루가 화약이 아니라는 견해를 내놓았음. 전씨가 9일 출국에 앞서 보안검색을 받을 때 폭발물흔적탐지기(ETD)까지 동원한 검사에서 화약 성분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이 가루가 폭발물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탁 수하물로 보내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사건을 수사 중인 경시청은 전씨를 건조물침입혐의로 체포했다는 것 외에 수사 상황을 발표하거나 한국 언론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며, 경시청이 전씨의 짐과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가루를 분석한 결과와 반입 경로에 관해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양측에서 진실 게임 양상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日경찰, 韓총영사관 배설물 투척 용의자 찍힌 CCTV 분석 착수(12/13, 연합뉴스)**
 - 12일 오전 9시께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시 소재 주요코하마 한국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상자가 발견됐으며,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상자는 가로 약 35cm, 세로 약 15cm, 높이 약 5cm 크기이며, 겉면에 ‘야스쿠니 폭파에 대한 보복’이라는 문구가 험한단체인 ‘재특회(재일<在日>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명의로 적혀 있었음.
 - 일본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에 착수했음. 총영사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영사관 CCTV에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찍혔다,”고 전한 뒤 “뒷모습과 점퍼를 입은 옷차림, 가방 정도가 식별 가능한 영상”이라며 “걸음걸이 등으로 미뤄 남성으로 보였다.”고 말했으며, 이 관계자는 “일본 경찰이 이 영상과 배설물 상자가 날아 들어오는 장면이 찍힌 다른 CCTV 영상을 복사해 갔다.”고 덧붙였다.
 - 일본 경찰은 총영사관 주변에 설치된 다른 CCTV 영상을 함께 분석하며 용의자 특징에 나설 전망이다.

라. 한·러 관계

- **한·러 투자촉진실무그룹 내년부터 가동…2월 첫 회의(12/11, 연합뉴스)**
 -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투자환경이 마련됐음. 기획재정부는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제1차 한-러 투융자플랫폼’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진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 양국은 차관급 인사가 공동 의장인 투자촉진실무그룹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2월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 그룹은 러시아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협력통로 역할을 하게 됨.
 -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외국인투자위원회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아울러 추가적인 공동협력사업을 내년 2월까지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음. 기재부는 “러시아는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갖춘 ‘기회의 땅’이지만 여건이 불확실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던 지역”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협력방안들이 마련돼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마. 미·중 관계

- “반체제 인사 탄압” vs “내정 간섭”...美獨 비판에 中 반발(12/10, 연합뉴스)
 - 미국과 독일이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맞아 중국의 반(反)체제 인사 탄압을 비판하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음. 외신에 따르면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구금된 인권 변호사들을 정부의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할 것”을 촉구했음.
 - 보커스 대사는 “미국 정부는 인권 변호사 및 중국의 미래에 관해 평화적으로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중 독일대사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중국에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음.
 - 이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그 어떤 국가도 중국의 사법독립과 주권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과 독일 측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식론과 방법론에서 심각한 편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화 대변인은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세계 어느 국가도 인권문제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등과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음.

- 오바마-시진핑, 기후총회 합의 위해 공동 노력키로(12/1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의 최종 합의문 도출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시 주석은 11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미 양국이 협력과 공동 노력을 통해 파리 기후총회가 소기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도 성명에서 “파리에 있는 협상단이 기후 변화협약의 야심 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양국 정상에 다짐했다.”고 밝혔음.
 -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주요 2개국(G-2)으로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는 각 회원국들이 최종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음.
 - 시 주석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새해를 앞두고 중미관계는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일부의 도전도 존재한다.”고도 했음. 이는 양국 간에 남중국해, 사이버 안보, 인권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런 문제가 양국관계의 큰 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바. 미·일 관계

- 위안부 강제성 부정 책 美 배포에 日집권당 개입 의혹(12/8, 연합뉴스)
 -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책 등이 최근 미국 국회의원과 학자들에게 배포되는데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음.
 - 문제의 책은 우익 성향인 일본 산케이 신문이 자사 연재물을 묶어서 펴낸 ‘역사전쟁(History Wars)’과 반한(反韓) 성향 학자 고젠카(吳善花) 다쿠쇼쿠(拓殖)대 교수의 ‘극복하기: 왜 한국은 일본 때리기를 중단해야 하는가’ 등 2권임. 영어로 번역된 이들 책은 올해 가을 미국 워싱턴 D.C.와 주요 대학에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교수와 학자, 전문가, 국회의원 등에게 배포됐음.
 - 8일자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 책들에 추천문을 쓴 국제 정치학자 출신 이노구치 구니코(猪口邦子) 참의원(자민당)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 안에 대외 발신(전파) 강화를 검토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책을 보내기로 했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서 추천문을 썼다.”고 말했음.
 - 도쿄신문은 취재 결과 두 책을 미국 학자 등에게 보낸 주체는 산케이신문 출판 부문의 부서로 드러났다고 전했으며, “자민당과 산케이의 밀월 양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오바마, 아베에 TPP 관련 축산농가보호정책 수정 요구”(12/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한 일본의 축산농가 보호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때 적자보전 비율을 80%에서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일본 측 양돈농가 지원책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음.
 - 미국 측은 일본 정부의 축산농가 지원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분석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아베 총리가 명확한 답변

을 하지 않자 미국 측은 다음날 미·일 농업 담당 각료 간의 협의에서 같은 요구를 했다고 교도는 소개했음.

사. 미·러 관계

- 미 국방부 ‘러시아 견제 강화’ 위해 내년 유럽안보 예산 증액(12/7,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동맹국들에 대한 안보공약인 ‘유럽안보재확인 이니셔티브(ERI)’의 차기회계연도 예산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가 7일 보도했음.
 - ERI는 지난 2014년 유럽에 대한 미 군사력 주둔 확대를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미 국방부의 고위관리들은 일련의 발언을 통해 미국과 대립을 빚고 있는 러시아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2017 회계연도 ERI 예산을 증액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국방부는 차기연도 예산증액을 통해 특히 발트해 연안 지역에서 러시아의 추가적인 모험주의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자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공약을 의심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간섭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년간 동구 등지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해왔으며 국방부는 지난여름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발트해 및 수개 동구국들에 탱크와 기타 중무기들을 사전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조 바이든 미 부통령도 7,8일 우크라이나를 방문, 시리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을 확약할 방침임.
- 우크라 방문 바이든 美부통령 “대러 제재 계속될 것”(12/7, 연합뉴스)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비탈리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백악관이 전했다.
 - 백악관은 “두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이 완전히 이행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의 국경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 하로 들어오기 전까지 대러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소개했음.
 -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이 지역과 지난해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통제로 되돌아오기 전까지는 대러 제재가 계속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음.

- 케리 美 국무, 내주 러시아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12/1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이 내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다고 AP가 11일 보도했음.
 - 미국 국무부는 오는 14일 케리 장관이 파리에서 열리는 시리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가하고 나서 파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할 예정이며 15일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바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음.

아. 중·일 관계

- 中-日 해경, 센카쿠서 신경전…“우리 영해서 나가라”(12/12,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를 놓고 또 한 번 갈등이 고조됐음.
 - 12일 중국 환구망(環球網)에 따르면 중국 해경선 2501, 2506 등 2척은 전날 오전 9시30분께 센카쿠 해역 12해리 이내에서 약 2시간 동안 순찰활동을 했음. 일본 순시선은 중국 해경선에 경고방송을 하면서 “일본 영해에서 즉각 떠나라.”고 요구했으며, 중국 해경선은 이에 대해 “‘다오위다오’는 역사적으로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귀국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으나 즉각 나가라.”고 맞받았음.
 - 양국 순시선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과 공방이 빚어졌으나 물리적인 충돌로 비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아베, 쿠릴 영유권 협상 위해 내년 봄 방러 추진”(12/10,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르면 내년 봄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지가

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음.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초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도쿄에서 만나 아베 총리의 러시아 조기 방문 의향을 전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 이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터키에서 진행된 러·일 정상회담 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지방 도시로 아베 총리를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데 대한 아베의 답변이었음.
- 내년 5월 일본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아베의 방러 시기는 내년 봄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으며, G7 정상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과 만나 각종 국제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의중을 미리 확인한 뒤 G7에서 논의를 주도하려는 포석임. 아베의 러시아 방문 시 푸틴과의 정상회담 장소로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등이 거론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세계인권의 날 맞아 “인권 최상으로 보장” 선전(12/10, 연합뉴스)
 - 북한이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우리 공화국(북한)은 인권이 최상으로 보장되는 나라”라고 선전했음.
 -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보는 관이한 인권상황’과 ‘인권이자 국권이다’란 글에서 “공화국은 창건의 선포와 함께 인민 대중의 참다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왔다”며 “인민들은 당과 국가가 펼치는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시책에 의해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누리며 보람찬 삶을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공화국을 방문한 외국의 벗들이 우리나라(북한)의 현실을 목격하고 한결같이 ‘인권이 최상의 경지에서 보장되는 나라’라고 격찬해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세계인권선언과 세계인권의 날’이란 글에서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공인하듯이 지구 상에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 또 이틀 전에 청소년 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준공식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시설을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꽃피우고 희망의 나래를 펼치는 사랑의 요람’,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지켜세웠음.
 - 이처럼 북한이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자신들의 인권상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선 것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란 채택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 내 아동·여성 등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희석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의도로 풀이됨.
- 북, 철도건설에 농민까지 동원(12/10, 자유아시아방송)
 - ‘백두산관광철도’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을 내년도 중요 과제로 내세운 북한이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농휴기를 맞은 협동농장 농장원들까지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 10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백두산관광철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부식물지원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협동농장들에서 농민들까지 동원해 암반 부수기 작업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백두산관광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돌격대원들은 땅이 얼기 전인 여름철과 가을철에 주로 로반 확장을 위한 흙 처리작업과 자갈보충작업을 해왔으나 암반이 있는 지역은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실정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 특히 ‘백두산관광철도’는 대부분 산기슭 아래 암록강을 따라 건설되기 때문에 암반지역이 많다고 그는 덧붙였다.
- 건설이 진행되는 양강도는 북한에서 제일 추운 고산지대여서 벌써 땅이 얼어붙어 흙 처리작업이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 ‘백두산관광철도’ 건설 지휘부는 땅이 얼어붙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12월 8일부터 일제히 암반 까내기 작업을 지시했다고 그는 언급했다.
- 암반 까내기 작업은 위험하고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 인원부족으로 북한 당국이 농민들까지 동원시킨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 건설 일정상 겨울철에 암반제거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작업장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 기계수단을 이용해 도로공사를 하기 어렵다며 건설자들이 오로지 정대와 해머로 암반을 일일이 까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北외무성 “유엔안보리 북한인권 토의 단호히 규탄”(12/12,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작년에 이어 또 논의한 데 대해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유엔 무대에서 갈수록 횡포해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책동에 고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끝까지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대변인은 안보리가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침략행위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는 기관이지 국제적인 인권보호 증진과 관련된 문제는 권능(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권능 밖의 일일까지 간참(간섭)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초미의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우리가 제소한 미국의 특대형 고문만행과 침략적인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문제들부터 취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올해 유엔 총회 제70차 회의를 계기로 제기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 북한인권

- 한국,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맡는다(12/8, 연합뉴스)
 -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중심적 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의장직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맡게 됐다.
 - 우리나라는 12월 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내년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 이에 따라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종 회의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최경림 대사는 의장에 선출되고 나서 연설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제도를 갖춘 번영된 나라로 발전한 한국에도 큰 영광”이라며 “내년에 설립 10년을 맞는 인권 이사회가 좀 더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가 인권이사회와 그 전신인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의장직에 선출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임.
 - 아태 지역그룹 내 일부 국가와 경합도 있었으나, 한국을 단일 후보로 전체 이사회 조직회의에 추천한다는 데 국가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큰 성과를 거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2016년은 인권이사회 설립 10년이 되는 해로 의장국 활동에 국제사회가 큰 기대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최경림 대사는 의장으로서 매년 3·6·9월 열리는 인권이사회 정기회기와 UPR 등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논의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꾸준히 이뤄져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맡는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부 당국자는 의장국 수입과 북한인권 논의의 관계에 대해 “의장직은 47개 이사국을 대표하는 것”이라며 “개인적 의견이나 개별 국가의 의견을

여기에 반영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우리가 어느 때보다 많은 (기구의)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면서 역동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유엔 안보리,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북한인권 논의(12/10, 미국의소리)

- 북한의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10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림.
- 유엔 소식통들은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중국이 회의 자체를 막기 위해 ‘절차 표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안보리의 절차 표결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고,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적어도 9개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지지하고 있음.
-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8일,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부총장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임.
- 당사국인 북한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북한은 지난 해 안보리에서 처음 열린 북한인권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음.
- 앞서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달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음.
- 유엔총회는 오는 12월 20일쯤 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임.
- 그러나 이번에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하더라도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제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에 北인권 책임자 회부해야”(12/10, 연합뉴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촉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월 10일 보도했음.
-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현지시간 12월 10일 오후)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책임자를 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 단체의 파람 프리트 싱 국제재판 상임고문은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이번 회의 개최에 찬성한 9개 안보리 회원국의 강력한 성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ICC 회부에 반대하고 있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의장 성명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서는 안보리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그는 아울러 “지난 6월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과 문서화 작업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음.
- 중·러, UN안보리 10일 북한 인권 논의에 반대 표명(12/10, 뉴시스)
-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미국 주도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음.
 - 9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인권문제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유엔 안보리가 한 국가의 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한결같이 반대한다”고 답변했음.
 - 이어 화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큰 틀에서 지역의 긴장정세를 해소하고 대화와 상호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음.
 - 앞서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자국을 포함한 안보리 9개 이사국의 지지 아래 10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고 일부 외신들이 안보리 외교관들을 인용해 양국의 이런 입장을 보도했음.

- 같은 날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대사는 9일 “안보리 회의 시작에 앞서 열릴 절차 표결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반대한다”고 시사했음.
 - 추르킨 대사는 “유엔의 모든 기구는 고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면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곳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케리 “북한 통탄할만한 인권위반…안보리 논의 환영”(12/1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공식 논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케리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그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 등을 조사한 오늘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또 “1년 전 이달 안보리는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인권 위반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중요한 이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특히 케리 장관은 “사법절차를 거치지않은 살인과 실종, 임의 체포, 성폭행과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 강제 노동, 강제 낙태, 고문, 8만~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의 수용소 구금 등 북한의 통탄할만한 인권위반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데 안보리 회원국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또한 북한이 세계인권선언에 반영된 사안들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3. 탈북자

- 유럽 북한인권단체, 중국 내 탈북여성 무국적 자녀 관심 촉구(12/9, 미국의소리)
 -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낳은 어린이들이 사실상 무국적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가 지적했음.
 -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 북한 난민의 무국적 어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 어린이들 대부분이 중국의 호적인 ‘호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어머니인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불법체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 신분이 노출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 또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의 결혼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보고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실시한 조사를 인용해, 중국에서 중국인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2~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 그러면서 호구를 취득하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로 전락한 이들 어린이들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이들은 또 어머니가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되면 어머니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이들 어린이들은 중국의 인정과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가 10년 안에 전 세계 어린이들의 무국적 상태를 끝내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어린이 문제도 이 운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엔인권사무소, 탈북자 사법지원 논의(12/11,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산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Seoul)가 오는 12월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함.
 -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해 지난 6월 설치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한국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행사임.
 - 사법정책연구원의 통일사법센터에서는 북한 사법제도와 한국 내 탈북자 인권 개선 문제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음.
 - 또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국과 제3국 내 탈북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실태 조사와

- 기록활동에 착수했음.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안윤교 인권관이 첫 번째 주제발표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입장과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이학인 연구위원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 사법정책연구원의 이학인 연구위원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한국에 거주한 탈북자들이 개인 간의 갈등을 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욕설·폭력으로 해결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한국 내에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론 등 탈북자를 위한 다양한 사법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탈북자 스스로 한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임.

4. 이산가족

- “北, 금강산 관광 재개 바로 안하면 이산상봉도 불가”(12/13, 데일리NK)
 - 지난 8·25 합의 후속으로 11, 12일 양일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남북 당국회담이 끝내 결렬됐음.
 - 남북은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논의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서임.
 -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관문점을 통해 연락하자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면서도 “북측으로부터 분명한 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 우리 측 대표단은 이번 회담 결렬 전 협상 재개 용의를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음.
 - 황 차관은 “월요일(14일)에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입장을 (12일 오후6시5분에 마지막으로 열린) 수석대표 접촉 직전에 통보했다”면서 “이에 대해 북측은 (수석대표 접촉에서) ‘남측이 관광 재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협상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 북한은 이번 회담 이틀간 “금강산 관광 재개 입장을 분명히 해서 먼저 합의문에

명시하면 (남측이 원하는)이산가족 문제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음.

- 북측이 11, 12일 동안 한 번의 전체회의와 다섯 번의 수석대표 접촉에서 이런 입장을 고수해 우리 측이 제기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음.
- 황 차관은 개성공단 현지 브리핑에서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을 ‘동시 추진, 동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면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문을 먼저 놓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실질적 협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FAO, ‘북한 산림 복구 사업에 15만 달러 지원’(12/9, 미국의소리)
 -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1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음.
 - 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의 더글라스 맥과이어 정책조정관은 ‘산림경관 복원 메커니즘(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 Mechanism)’ 운영위원회가 지난 7월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 자금은 산림 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음.
 - 현재 북한 산림 황폐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이 산림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어떠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임.
 - 맥과이어 조정관은 식량농업기구가 곧 북한에 파견할 산림 정책 고문관을

고용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쯤 북한을 방문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6년은 본격적인 산림 복구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선 “준비 기간”이라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산림 현황을 분석하고 산림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지 당국자들과 논의해 산림 황폐화 방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설명임.

■ WFP·FAO, 북에 엘니뇨 대응 지원(12/10, 미국의소리)

- 북한이 이상기후변화인 엘니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각각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16개국에 포함된다고 두 구호기구 산하의 협력담당 기관이 밝혔다.
- 세계식량계획 산하로 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조직된 식량안보단(Food Security Cluster)은 10일 공개한 ‘엘니뇨 대비와 대응 지도’에서 북한을 비롯해 전세계 29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동아시아 지역에는 북한과 몽골이 지원 대상국인데 몽골은 식량농업기구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북한은 두 기구가 각각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6월 발표한 북한의 식량상황을 평가한 국가보고서(Country Brief)에서 엘니뇨로 불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한의 올해 곡물생산이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음.
-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는 가뭄이나 폭우 등 급격한 기상변화를 불러오는 엘니뇨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며 북한을 상대적으로 기상급변에 대비가 부족한 지역으로 우려했음.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산림황폐화 방지를 위해 산에 나무를 심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식량계획 역시 홍수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북한 4개도에 1천372 헥타르에 달하는 산간지역에 나무 700만여 그루를 심었음.
- 유엔 구호기구의 보고서는 즉시 나무를 심어야 할 민둥산이 북한 전체 땅의 11%가 넘는다면 산림 조성에 집중해야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부족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음.

■ 아일랜드, WFP 대북 사업에 26만5천 달러 지원(12/11, 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대북 영양 지원 사업과 관련해 26만

- 5천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은 1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 아일랜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
 - 특히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 새로운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아일랜드 정부가 이 기구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90만 달러(\$ 903,387)에 달함.
 - 세계식량계획은 각국 정부의 기부금으로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게 영양강화식품 등 식량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세계식량계획의 달린 타이모(Darlene Tymo) 북한사무소장은 지난 7일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음.
 - 타이모 소장은 이날 러시아의 관영매체인 ‘이타르-타스 통신’에 현재 대북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은 목표 금액의 53%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음.

8. 북한동향

- 우리 국회 여야당의 ‘北 인권법’ 정기국회 처리 합의 관련 ‘우리(北)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공 화국 모략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과 남 사이의 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저명한 사실’이라고 비난(128, 평양방송/북남 대결을 격화시키는 불순한 도발행위)
- 가치관과 인권기준은 “전인류를 대상으로 한 위험천만한 인권말살 행위”라고 미국의 “인권재판 관 행세(北인권문제 제기 등)” 비난 및 ‘인민대중의 인권옹호 투쟁’ 강조(129, 중앙방송 노동신문 중앙통신/인민대중의 인권을 옹호하자)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